



주간통일정세 2011-12(2011.03.14 ~ 03.2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1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김정일·정은, 해군협주단 공연 관람(3/13, 조성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통신은 “김정일 동지께서 해군협주단 예술인들이 조국의 바다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가는 용감한 해병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반영한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가지고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함.
 - 리영호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김기남·최태복·홍석형 비서,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양건·박도춘·최룡해·태종수 당 비서, 김원홍·정명도·현철해·리명수 대장, 한동근 상장도 이날 공연에 동행
- **北 외무상, 러시아 외무차관과 담화(3/14, 조성중앙통신)**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의례방문’했으며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지만 담화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1일 방북했으며 지난달 16일에는 김영재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를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 등을 논의
- **北 집단 의사결정체제…장성택 주도 추정(3/16,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핵정책 결정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가 2008년 8월 뇌졸중 발병 이후 집단적 의사결정체제가 나타났고,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이를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이 뇌졸중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핵심적 군 지휘관을 포함한 집단 의사결정체제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북한의 핵정책 형성 과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힘.
 - 보고서는 북한의 핵계획은 원자력공업부가 총괄하고 있고 부 산하에



방사성동위원소 위원회와 핵에너지 위원회 등 여러 핵 관련기관과 연구소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정부가 북한에 핵시설이 20개, 전문인력이 3천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무기 불법수출로 정권 유지…(3/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랜돌프 알레스 미 태평양사령부 전략계획·정책 국장은 1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이는 자금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무기 관련 기술을 타국에 전파해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北,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해임(3/16,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 주상성이 신병관계로 해임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인민보안부장은 우리의 경찰청장격으로 주 전 부장은 지난 2004년부터 인민보안부의 전신인 인민보안성의 수장인 인민보안상을 맡아 왔음.
- 그는 지난해 9월 당대표자회 직후 김정은 후계체제 아래에서 공안기관의 현역 장성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로 회의에서 당 정치국 위원과 중앙위원에 올랐으며, 이후에도 주요행사 때마다 주석단 첫 줄에 자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도나 공연관람 시에도 자주 수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해옴.

● **김정일·정은父子, 해군부대 산하공장 시찰(3/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을 대동하고 인민군 해군 제597군부대 산하 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 일행이 언제 이 공장을 시찰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사적물과 사적자료가 보관된 ‘연혁소개실’을 방문해 “아버이 수령님이 몸소 터전을 잡아주고 현대적인 병기창으로 꾸려주시는 등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 속에 공장은 자랑찬 승리의 한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노동계급은 수령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영원히 심장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말함.
- 위원장은 또 공장의 기술장비 상태와 생산 과정을 돌아본 뒤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난공불락”이라며 “지난날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당의 선군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공장 관계자들을 치하
- 김 위원장의 공장 시찰에는 김정은 외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겸 당 행정부장, 정명도·현철해·리명수 대장, 오철산 상장이 수행



- **北신문, 南에 남북대화 성신탈도 요구(3/1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신문은 17일 '남조선 당국의 진정성 타령을 평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와 대화문제를 우롱하지 말고 성실한 태도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노동신문은 천안함 사건을 '모략적 정체가 드러난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응당한 대응조치,' 비핵화 요구를 '미국과 논의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북남관계에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 정부의 진정성 요구에 대해 "진정성 타령은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대결과 전쟁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이라며 "우리는 이미 남측에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다"고 덧붙임.

- **北 최고인민회의 예고...김정은에 시선 집중(3/1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중앙통신은 18일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5일 발표됐다"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내달 7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9.28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선임된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에 선임될지가 주목됨.

- **北 김정일, 정주영 10주기에 구두 친서(3/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연합뉴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사망 10주년을 맞아 추모구두 친서를 보내 "정주영 선생은 민족화해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성업을 위해 참으로 큰 일을 했다"며 "그의 명복을 기원하며 아울러 현대 일가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현대아산에 따르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18일 현대아산 금강산 사무소를 찾아와 김 위원장의 친서를 낭독했고 이를 현지에서 있던 직원이 받아적어 서울에 전달
 -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정주영 명예회장 10주기를 맞아 남한에서 열린 추모 행사를 소개하며 "1989년초부터 우리 공화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만나 빈 명망있는 기업가," "북남사이의 경제교류협력사업에도 수많은 기여를 한 애국적 기업인"이라고 소개



■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 관람(3.13, 중통).
김정은, 이영호, 김기남, 최태복, 홍석형, 김경희, 장성택, 김정각, 김양건, 박도춘, 최용해, 태종수, 김원홍·정명도·현철해·이명수(대장들), 한동근(상장)
- 김정일, 해군 제597군부대 관하 공장 시찰(3.16, 중통·중방).
김정은(黨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정명도·현철해·이명수(軍 대장들), 오철산(상장) 동행
- 김정일,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및 가스화 건설자들이 올린 편지에 '친필서한'(2011년3월10일 김정일) 전달(3.17, 중방)

■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조선인민군 해군협주단의 공연 관람(3.13, 중통)
- 해군 제597군부대 관하 공장 시찰(3.16,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라선시 부위원장, 中지린서 경협 논의(3/18, 길림일보)

- 신문은 황철남 북한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吉林)성을 방문, 왕루린(王儒林) 성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
- 왕 성장은 황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노후 공업기지 진흥 정책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린-훈춘(琿春) 간 여객철도가 착공되는 등 지린성의 기반시설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지린성과 라선시 간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양측의 변경 무역과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두 사람의 면담에 이어 천웨이건(陳偉根) 부성장을 비롯한 지린성 간부들과 라선시 대표단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음.
- 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중국이 처음으로 훈춘의 석탄을 라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운송한 데 이어 투먼(圖們)시가 이달 초 연내에 청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짐.

● IC칩 내장 북한 체크카드 ‘나래’ 공개(3/18, 민족통신)

-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온라인매체 ‘민족통신’은 18일 “해외동포와 국제인사들이 드나드는 (북한의) 호텔이나 상가들에는 전에 없던 신용카드 ‘나래’가 등장했다”며 전자결제카드인 ‘나래’의 사진을 공개



- 민족통신은 “북조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결제카드지만 그 형식과 사용방법이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며 “돈을 넣고 그 잔금을 사용하는 형식으로 신용카드보다는 (미국의) 데빗카드와 유사했다”고 설명

■ 기타 (대내 경제)

- 北 평양남새과학연구소·평양화초연구소, “첨단수준의 새 품종 육종 체계와 재배기술 확립 및 최신식 연구생산기지로 전변” 자랑(3.14, 중통)
- 北, 김정일 저작(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토지정리의 위대한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자) 발표 7돌(2004.3.16) 즈음 “올해 식량증산투쟁 중요성” 강조(3.16, 중방)

다. 군사

● “美정보국, 北 미사일 주요 수출국 지목”(3/15,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10 세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획득과 이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장비와 부품, 소재, 기술을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수출해 왔다”며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처”라고 지목함.
- 보고서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 체계와 부품을 수출할 의사를 분명히 내보였다”며 “이는 해당 국가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생산기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
- 이어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돈독한 관계이며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위해 새로운 고객을 찾는 동시에 기존의 고객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對) 이란, 시리아 미사일 수출을 점침.

라. 사회·문화

● 北, 올해도 아리랑 공연 개최(3/16,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세계 기네스 기록집(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적인 걸작품인 ‘아리랑’이 계속 진행된다”며 “올해 조선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하면서도 올해 아리랑 공연의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음.
- ‘아리랑’ 공연은 연인원 10만명이 동원돼 1시간20분 동안 진행되는 세계 최대 집단체조로 지난 2002년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하며 처음 열렸으며 2005년 두 번째 공연 이후 수해로 취소된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려 올해로 7회를 맞음.



- 북한은 ‘아리랑’ 공연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의 고려여행사는 4박5일 일정으로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각종 입장료와 ‘아리랑’ 공연 관람료를 포함해 1천500유로~1천800유로의 ‘아리랑 관광’ 상품을 내놓음.

● **남편에게 매 맞는 北여성 신고해도 웃어넘겨(3/17, 연합뉴스)**

-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17일 오후 서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발표한 ‘부서진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노동을 강요받는 북한 여성들은 북한 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가부장제에도 시달린다. 가정폭력은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힘.
- 고서는 2000년~2009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 20명과 남성 5명을 대면 인터뷰를 토대로 북한여성에 대한 폭력실태를 담음.
- 함경남도 함주에 거주하다 2007년 탈북한 강민철(34)씨는 “아내가 남편한테 맞아서 보안서(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맞은 구실을 만들었으니 맞는 거지 남편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맞을 일을 안 했는데 때리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며 “가정 폭력 피해자 중 1만 명이 있다면 한 명이 신고를 할까 말까 한다. 신고하면 보안원 대부분은 웃고 넘긴다”고 증언
- 보고서는 또 “직장에서도 남성이 여성에게 폭언과 욕설, 성적 농담을 일삼는 것이 용인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여자가 행실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탈북자들은 탈북과정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이 두려워 중국인 남성과 강제혼인이나 브로커의 성적착취를 감내해야 하는 등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
- 이어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폭력은 경미한 죄”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건을 취급하는 보안원과 판사가 모두 남성들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설명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北 평양교예단이 새로 창조한 ‘대형환상요술공연,’ “4월 18일 5월1일경기장에서 개막 예정” 선전(3.14, 중통)
- 北 국가우표발행국, ‘朝中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50돌 즈음 우표(묶음전지 2종) 발행(3.15, 중통)
- 北 내각, 성·중앙기관들의 금수산기념궁전 주변 植樹 및 강원도 원산시(4만2,500그루) 등 전국적으로 “봄철나무심기 전개” 보도(3.17,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적십자, 日대지진 피해에 위로 전문(3/14,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에 따르면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輝)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낸 전문에서 “귀국의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지진 및 해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이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이름으로 당신과 피해자, 또 그 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밝힘.
 - 장 위원장은 이어 “일 적십자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피해자들의 생활이 하루빨리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파키스탄 대사에 로경철 임명(3/16,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파키스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로경철이 임명됐다”고 밝혔으나 로 신임 대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北, 日대지진 간략보도서 상세보도로 급변 (3/17,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중앙방송)**
 - 북한은 지난 12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이 외신을 인용해 “리히터 규모 8.8의 강한 지진이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넓은 지역을 휩쓸었고 해일이 닥쳐 일대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며 일본의 지진피해 상황을 처음으로 간략히 전했고 13일에는 조선중앙TV가 저녁 8시 보도를 통해 20초간 피해소식을 내보냈지만 간략한 보도로 일관
 - 하지만 지난 14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의 위로전문 발송을 계기로 일본의 대지진 피해 소식을 연일 상세히 전하고 있음.
 - 중앙통신은 14일 밤 8시께 위로전문 발송소식을 전한 직후 일본의 지진피해를 상세히 전하기 시작하면서 NHK방송을 인용해 인명피해 규모를 전하고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폭발상황까지 보도했고 중앙방송도 같은 내용을 전함.
 - 노동신문은 15일자와 16일자에 일본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 등을 소개했으며, 중앙통신은 16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일본에서 파국적인 지진과 해일로 일대 혼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상황을 담은 사진을 특집으로 게재
 - 중앙방송은 16일 밤 “원자력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일본은 물론 주변 나라들에도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10만 명 이상의 구조대를 파견해 재난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
 - 방송은 또한 “최근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지



진피해와 관련해 유엔이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현재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40여개 나라의 약 70개 긴급구조단이 파견됐거나 파견대기 상태에 있고 여러 나라들이 인도주의 구조물자들을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나. 6자회담(북핵)

- **러 외교부 “北에 6자회담 위한 실질적 조치 촉구”(3/14, 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및 실험 중단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러시아 측은 이같은 입장을 11~14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밝혔다.
 - 러시아 외무부는 발표문에서 “11~14일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무부 간 정례 협의회가 열렸으며 이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북한 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궁석용 부상 등이 참석했다”면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도 면담했다”고 전했다.
 -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음을 천명할 것과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등을 중단할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조사와 북한 우라늄 프로그램을 6자회담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할 것, IAEA 조사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도록 초청할 것 등을 요구

- **北대표 “우린 핵보유국…핵군축 노력”(3/15, 조선중앙통신)**
 -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중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대표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는 핵군축의 목적과 견지에서 볼 때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핵보유국들의 법적 의무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동반하는 핵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 북한 대표는 또한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라고 평화적 핵 활동조차 문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고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

● 北 “6자회담서 우리늄농축 논의 반대 안해”(3/15,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방북결과를 전하면서 “조선 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리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변인은 “러시아 측은 조선이 핵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영변지구의 우리늄 농축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의 접근, 6자회담에서 우리늄 농축문제 논의 등 건설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조선 측은 회담이 재개되면 러시아 측이 제기한 기타 문제들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9.19공동성명의 이행과정에서 논의·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러시아 측은 조선반도의 긴장격화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남관계 개선을 돕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 3자 경제협조계획이 전망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조선 측은 3자 경제협조에 관한 러시아 측의 계획에 지지를 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3자 실무협상제안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

3. 대남정세

● 北, ‘GPS 혼신행위 항의서한’ 접수 거부(3/15, 연합뉴스)

- 통일부는 15일 최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장애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연락관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힘.
- 방통위는 항의서한에서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

● 北, 백두산화산 협의제의…정부 “검토”(3/17, 연합뉴스)

- 통일부는 17일 북측이 이날 오후 지진국장 명의로 백두산 화산 공동 연구와 현지답사, 학술토론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시켜 나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우리 측 기상청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밝힘.

- 정부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북측의 제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남하 北주민 31명’ 관련 보도]

○ 남하, 北주민 27명 송환 합의(3/15,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15일 오전 11시께 판문점 연락사 무소(적십자채널)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억류된 주민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해상을 통해 27명을 우선 돌려 보내라”고 요구
- 이는 북측이 그동안 남측의 귀순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귀순의사를 밝힌 4명을 포함한 31명 전원송환을 요구하던 데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 오후 3시45분께 한적 명의로 조선적십자회에 전통문을 보내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상을 통해 북한 주민 27명을 송환 하겠다”고 화답
- 정부는 또 현재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북측이 원하면 16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27명을 송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지만 북측은 판문점 연락관 마감통화를 통해 “서해상 날씨가 좋아지면 해상 경로를 통해 주민 27명과 배를 넘겨받을 것”이라며 해상 송환을 재차 확인

○ 北주민 27명 송환 서해 파고로 ‘불발’(3/16,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해를 통해 송환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서해 기상이 좋지 않아 오늘 중 송환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달 남하한 북한 주민 27명 송환이 서해 기상 악화로 이뤄지지 못함.
- 앞서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속하고 안전하게 송환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오전 현재 서해 해상 날씨가 (북한 주민이 타고온) 5t급 소형 목선을 운항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함.
- 정부는 해군이나 해경을 통해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인계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됨.

○ 北주민 27명 송환 연기…선박고장(3/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오전 9시10분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북한 주민이 타고 왔던 선박의 고장으로 오늘 송환이 어려우며 송환 일정을 다시 통지 하겠다”고 통보했고 북측은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정부는 당초 북한 주민 27명을 이들이 표류할 때 타고 온 선박(5t급 소형 목선)에 태워 오후 1시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었음.
-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달 5일 북한 주민들이 표류했을 당시 타고 온 선



박 엔진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엔진을 교체해 운항점검까지 마쳤는데, 오늘 최종 점검과정에서 엔진상태에 문제가 생겨 운항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

○ **北주민 송환 빨라야 내주 초 가능할 듯…(3/18,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18일 “오늘 중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타고 온 선박의 수리를 마치기 어렵다”면서 “주말에는 판문점 연락관이 문을 닫는 사정을 감안하면 주민들 송환은 현실적으로 다음 주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함.
- 주민들이 타고 온 선박(5t급 소형 목선)은 엔진 이상으로 현재 운항이 불가능하며 선박이 워낙 낡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남)**

- 統一部の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움직임을 “南北 민간단체들 사이의 접촉의 실마리마저 끊으려는 책동”이라고 비난(3.14, 중통·노동신문)
- 統一部長官의 對北발언(北 비핵화, 대외개방 유도 등) 관련 “우리(北)를 무장해제 시키고 북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계” 등으로 원색적 비난(3.15, 중통·노동신문·평방)
- 統一部の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벌금딱지를 휘두르며 동족과 협력교류에 나서려는 사람들을 탄압할 구멍수만 찾고 있다”고 비난(3.16, 중통·노동신문·중방)
- KBS방송인용, 민방위훈련 실시 관련 “전쟁열을 고취했다”고 간략 보도(3.17, 중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외교부 “北에 6자회담 위한 실질적 조치 촉구”(3/14)

- 러시아가 북핵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및 실험 중단과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등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러시아 측은 이 같은 입장을 11~14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의 면담 등을 통해 북측에 전달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이날 내놓은 언론 발표문에서 밝혔다.
- 러시아 외무부는 발표문에서 “11~14일 평양에서 러시아와 북한 외무부 간 정례 협의회가 열렸으며 이 회담에는 러시아 측에서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북한 측에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궁석웅 부상 등이 참석했다”면서 “보로다브킨 차관은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도 면담했다”고 전했다.
- 발표문은 “양측이 전통적인 상호존중과 신뢰 분위기 속에서 양자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강조점이 주어졌다”고 소개했다.
- 발표문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정치-외교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미룰 수 없는 필수 사안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협상 과정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북한이 일련의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행보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로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기초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 테이블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음을 천명할 것과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 등을 중단할 것,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조사와 북한 우라늄 프로그램을 6자회담 안건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할 것, IAEA 조사단이 영변 핵시설에 복귀하도록 초청할 것 등을 요구했다.
- 발표문은 또 러시아 외무부 대표단이 남북한 간 대화 재개와 협력 관계 확립을 지지하며 러시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철도망 연결, 러시아에서 출발해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연결되



- 는 가스관 건설, 유사한 노선을 통과하는 송전선 건설 등 러시아 측이 제안한 프로젝트들이 아주 유망하다고 발표문은 강조했다.
- 발표문은 또 “러시아 측은 특히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의 추가적 발전과 정치·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양자협력에 새로운 자극을 줄 필요성에 대한 의사도 밝혔다”며 “러시아는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이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규모를 5백만 달러까지 늘렸을 뿐 아니라 양자 관계에 기초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외무부의 발표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박의춘 외무상이 1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 그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이 ‘의례방문’했으며 친선적인 분위기에서 담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담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었다.

● 北 “6자회담서 우라늄농축 논의 반대 안해”(3/15)

- 북한이 최근 방북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혀 주목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보로다브킨 차관의 방북결과를 전하면서 “조선 측은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갈 수 있고 6자회담에서 우라늄 농축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가 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하고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 진전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에 6자회담 무조건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외무성 대변인은 러시아 측이 ▲핵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의 영변 내 우라늄 농축기술 접근 허용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며 “조선 측은 회담이 재개되면 러시아 측이 제기한 기타 문제들도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9.19공동성명의 이행과정에서 논의·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 한·미·일은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UEP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핵시설 모라토리엄(중단) 선언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외무성 대변인은 “러시아 측은 북남관계 개선을 돕는 측면에서 러시아와 조선의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도와 가스관 부설, 송전선 건설 등 3자 경제협조계획이 전망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조선 측은 3자 경제협조에 관한 러시아 측의 계획에 지지를 표시하고 그 실



현을 위한 3자 실무협상제안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러시아의 중재 속에 남북 관통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등을 위한 논의가 남북 간에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北핵시설은 안전한가..‘안전성’ 경고음>(3/15)

-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북한 내에는 가동중인 원자로가 없는데다 규모 자체도 작아 일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경수로 건설과 가동 여부에 따라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미 지난해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우리농축시설을 전 세계에 공개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이 매우 긴급한 문제라고 경고한 바 있음. 헤커 박사는 지난 1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핵 안전을 위해선 각종 경험이 축적된 여러 나라와의 공조와 노하우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된 상태라는 점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 헤커 박사는 이어 “북한이 지난 24년간 핵을 다루면서도 아직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하면서도 “안전문제가 국제 공조 등의 형태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자칫 가동 중에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인근지역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음.
- 현재 북한이 보유중인 핵시설은 1986년 건설한 5MW 실험용 원자로와 1965년 구소련이 영변에 건설해준 IRT-2000 원자로, 재처리 방사실험실, 핵연료가공공장 등 4기임. 이중 5MW 실험용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돼 있고 IRT-2000 원자로는 그야말로 ‘연구용’에 불과해 일본과 같은 폭발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임. 다만 재처리 시설의 경우 소량의 방사능이 누출돼 인근지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핵전문가들의 설명임.
- 원자력 통제기술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안전 관리기술이 열악해 재처리 시설 등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고준위 폐기물 관리도 소홀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기술을 배운 구소련 자체의 핵안전 수준이 높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영변에 새로 짓고 있는 실험용 경수로임. 북한이 2012년까지 건설하겠다고 공언한 이 경수로는 열출력 100MW이며 전기출력으로 환산할 경우 25~30MW로 추정되고 있음.
- 북한은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안전관리 기술로는 안전성에 커다란 문제가 생겨 또 다른 ‘방사능 공포’를 몰고 올 개연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통일연구원 전성훈 박사는 “현재 북한 핵시설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 경수로가 건설돼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 영변지역에 진행중인 경수로 공사는 모든 이웃국가들에 심각한 안전상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보다 (영변 경수로와 관련된) 핵 안전 문제가 더 긴급한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대표 “우린 핵보유국…핵군축 노력”(3/15)

-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재차 주장하면서 핵군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대표는 제네바 군축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중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대표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 안전담보제공문제는 핵군축의 목적과 견지에서 볼 때 절실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고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핵보유국들의 법적 의무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동반하는 핵무기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을 내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라고 평화적 핵 활동조차 문제시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은 특정한 나라만 누릴 수 있는 특전이 아니고 주권국가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 이 같은 태도로 미뤄 북한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보유국으로서 핵군축협상을 촉구하면서 경수로 발전소 건설 등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러’ 의무 北 6자회담 복귀 입장 환영”(3/16)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입장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다고 서울에서 수신된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6자회담에 복귀할 조선(북한)의 입장을 환영하는 러시아 외무상’ 제목의 기사에서 “15일 조선의 언론들은 조선이 전제조건이 없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美 “北 구체적 조치필요” 거듭 촉구(3/18)

- 미국은 17일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행동을 기본적으로 정리하고, 행동이 변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조치를 여전히 원한다”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eP)을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더 많은 조치들을 우리는 독려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남북간의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원한다”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다른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듭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국제적 의무준수를 포함한 구체적 조치들을 북한이 취하길 원한다”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우리는 단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실질적 진전으로 가기에 앞서 북한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그는 천안함 피격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건과 관련해 확실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북한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나. 미·북 관계

● “美정보국, 北 미사일 주요 수출국 지목”(3/15)

-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최근 북한을 대량살상무기·미사일의 기술과 부품을 중동 등에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지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 방송에 따르면 DNI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10 세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획득과 이전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장비와 부품, 소재, 기술을 비롯해 미사일 시스템 전체를 중동, 남아시아, 북아프리카에 수출해왔다”며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의 주요 공급처”라고 지목했다.
- 보고서는 “북한은 탄도 미사일 체계와 부품을 수출할 의사를 분명히 내보였다”며 “이는 해당 국가의 미사일 사거리 확대와 생산기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북한은 이란, 시리아와 돈독한 관계이며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위해 새로운 고객을 찾는 동시에 기존의 고객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對) 이란, 시리아 미사일 수출을 점쳤다.
- RFA는 “북한이 1990년대 말부터 시리아의 비밀 핵 개발을 지원했다”며 “시리아의 핵시설이 공습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북한이 핵물질과 기술을 시리아에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美, 北 100여 기관·개인 우편물도 제재”(3/16)

- 우리의 우정본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우정공사(USPS)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기관·개인 주소 100여 곳으로의 우편물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전했다.
- RFA는 “USPS는 미국에서 북한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은 해외자산



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이 지정한 ‘특별지정국’(SDN)이나 ‘제재대상자’ 목록에 오른 개인과 단체에는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있다”며 “이 목록에 오른 개인과 단체의 주소가 100 여곳”이라고 설명했다.

- 이 방송에 따르면 배달금지 대상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을 비롯한 북한 정부기관에서부터 무역회사, 은행, 학교 등이 포함돼 있음. 개인으로는 북한 원자력총국의 리제선 총국장, 북한 무기밀매 거래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윤호진 등이 배달금지 목록에 들어 있음.
- 방송은 “이 목록에 오르지 않은 대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민간 우편물은 보통국제우편 서비스를 통해 북한으로 배송된다”며 “그러나 USPS가 북한으로 가는 우편물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우편물이 오가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방송은 또 “미국에서 북한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홍콩행 우편물과 함께 홍콩으로 운송된 뒤 현지에서 북한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전했다.

● 美 “北, 핵, 미사일, 특수부대에 더욱 의존”(3/17)

- 랜돌프 엘리스 미 태평양군사령부 전략기획·정책 담당 국장은 15일 (현지시간)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에 의존하기 힘들게 된 북한이 점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특수부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들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를 통해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정권은 억압과 공포, 외부세계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의 비틀거리는 경제는 불량정권과 조직으로의 무기기술 확산 및 범죄활동 네트워크 증가로 만들어진 현금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 내 권력 이양도 우려”라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의 합법성을 구축하기 위해 유발된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고 전했다.
- 이와 관련, 그는 “투명성 부족과 김씨 일가의 왕조세습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북한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할 잠재적 원천이자 태평양군사령부의 주요한 우려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또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및 미러한미동맹 구축과 관련, “이런 전환은 한반도 주둔 미군을 역내 및 글로벌 임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이클 쉬퍼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은 북한이 역내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과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된 매우 능력있고 전진 배치된 전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줬다



고 지적했음.

-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또 “강력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전진 배치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킨다는 우리의 결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과 같은 정기적인 훈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음.

다. 중·북 관계

● 中외교부 “김정은 방중, 들은 바 없다”(3/17)

- 중국 외교부 장위(姜瑜) 대변인은 1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설과 관련해 “관련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음. 장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음.
- 한국 정부 당국자도 이날 “김정은 방중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금명간’ 혹은 ‘이르면 오늘’ 정도의 동향이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작년 9월 당 대표자회를 통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 부위원장이 중국의 양회가 끝난 직후부터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사이에 방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장 대변인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9.19공동성명의 각 조항을 실천하는 것이 관련국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관련국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조성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
- 그는 북한의 우리농 농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관 문제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 北 라선시 부위원장, 中지린서 경협 논의(3/18)

- 황철남 북한 라선시 부위원장이 지난 16일 중국 지린(吉林)성을 방문, 왕루린(王儒林) 성장과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길림일보가 18일 보도했음.
- 왕 성장은 황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동북노후 공업기지 진흥 정책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두만강) 개방 선도구’ 개발 계획에 따라 지린-훈춘(琿春) 간 여객철도가 착공되는 등 지린성의 기반시설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린성과 라선시 간 경제 협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양측의 변경 무역과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황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린성과의 경제 협력과 교역 증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길림신문은 두 사람의 면담에 이어 천웨이건(陳偉根) 부성장을 비롯한 지린성 간부들과 라선시 대표단이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왕 성장은 또 황 부위원장을 통해 조정호 라선시 위원장을 공식 초청했음.
 - 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중국이 처음으로 훈춘의 석탄을 라진항을 거쳐 상하이로 운송한 데 이어 투먼(圖們)시가 이달 초 연내에 청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를 개통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임. 이에 따라 대북 전문가들은 황 부위원장의 이번 방문이 중국의 라진항을 이용한 동해 항로 운항 본격화와 투먼-청진 해상 항로의 연내 개통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북한 외자유치 전담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라선특구 5개년 협력개발 계획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대지진> 北위로전문, 분위기 반전 노린 듯(3/15)

- 북·일 관계가 최악인 가운데 북한이 일본 지진 피해에 위로의 뜻을 전달해 시선을 끌었음. 북한은 14일 장재언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의 전문을 고노에 다다테루(近衛忠輝) 일본적십자사 대표에게 보내 “동북부 지방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지진 및 해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이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게 돼 당신과 피해자, 또 그 가족들에게 동정과 위문을 보낸다”고 밝혔음.
- 북한이 일본에 이 같은 위로전문을 보낸 것은 일단 일본에 보내는 국제사회의 온정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우리도 할 도리는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을 ‘반인권’ 국가로 지목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겪는 대재앙에 대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위로의사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정상국가’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임.
- 북한은 1995년 고베 대지진 때는 당시 강성산 총리가 나서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에게 위로전문을 보냈고, 2004년 니가타(新潟)현 지진피해에도 적십자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한 바 있음. 북한은 고베지진 당시 20만달러, 니가타 지진 때는 3만달러의 위문금을 보내기도 한 바 있어 이번 대지진 피해와 관련해서도 성금을 보낼 가능성이 커 보임.
- 이와 관련, 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는 15일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일본 지진피해에 위로의사를 전함으로써 말쑥꾸러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번 위로전문에는 북·일 수교회담의 재개를 노린 북한 측의 속내도 동시에 담겼다고 보는 이들도 있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일본이 대북제재로 맞서면서 양국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 지진참사에 위로를 전달함으로써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것임. 최근 일본 정부가 대북협상에 다소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화해무드를 조성함으로써 회담 재개의 디딤돌을 놓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임.
- 일각에서는 이번 위로전문에는 납치 문제 등으로 북한에 적대적인 일본 국민의 여론을 누그러뜨리려는 북한의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한 대북 전문가는 “일본의 여론이 북한문제에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이번 지진 피해로 인한 아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본내 대북시각을 조금 바꿔보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김국방, 美 그렉슨 국방차관보 접견(3/14)

- 김관진 국방장관은 14일 방한 중인 윌러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접견했음.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서 그렉슨 차관보를 만나 40여분 간 환담을 나눴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렉슨 차관보는 곧 퇴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인사차 방문한 자리라서 특별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음.
-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낮에는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독수리 연습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현안과 양국 간 국방 협력 방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음.

● 美의원 “한·미 FTA, 개성공단産에 적용 우려”(3/17)

-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내용이 북한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이 FTA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했음.
-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소위의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의원은 16일자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기고한 글에서 “한·미 FTA가 북한을 이롭게 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셔먼 의원은 “국가 안보와 (개성공단의) 노동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이 FTA에 따른 무관세나 다른 특혜를 받지



-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데) FTA 협정 내용에는 북한산 제품을 제외한다는 언급이 없다”고 밝혔다.
- 그는 “현재 한미 FTA 협정문은 개성공단에서 100% 만들어진 상품을 한국산으로 규정해 미국시장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할 소지가 있다”면서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부분을 거론했음.
 - 셔먼 의원은 부속서 22-나 중 ‘위원회의 일치된 동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양 당사국에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 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승인을 구할 책임을 진다’는 부분의 내용의 아주 모호해 ‘입법적 승인(legislative approval)’이 의회의 실질적인 승인을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음. 그는 따라서 “FTA 협정내용을 개성공단이나 다른 북한 지역에게까지 적용하는 결정은 명확히 의회의 법률로 승인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후 1주년이 되는 날 처음 열릴 수 있으며, 향후 개성공단 제품이 실제로 FTA 적용을 받으려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음.

● 미국방부 “주한미군 유지해야”(3/17)

- 마이클 쉬퍼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15일(현지 시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쉬퍼 부차관보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들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를 주제로 열린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장기적인 준비 태세를 확실히 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킨다는 우리의 결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강력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의 전진 배치”라면서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과 같은 우리의 정기적인 훈련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음.

나. 한·중 관계

● 김외교 28일 방중..北 UEP, 6자재개 협의(3/18)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외교소식통이 18일 전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중은 한·중 외교장관 연례 교류방문의 일환으로 지난달 23~24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에 따른 답방의 의미를 갖고 있음.



- 김 장관은 방중 기간 양제츠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예방할 예정임. 한·중 양국은 양자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면서 북한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 대응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측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 UEP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 측은 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김 장관은 양 부장과 원 총리 이외의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다. 한·일 관계

● <日대지진> 정부, 對日 ‘맞춤형 지원’ 추진(3/15)

- 정부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 외교통상부를 교섭 창구로 일원화해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이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모든 지원이 질서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여러 인도적 지원은 외교통상부를 교섭 창구로 하되 정부 각 부처의 지원은 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해 결정키로 했음. 또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민간 차원의 지원은 양국의 적십자사를 기본 창구로 하기로 했다고 임 실장은 전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행정안전부로, 기업과 사회단체의 지원은 각각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함.
-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지진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 점검키로 했음. 특히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으로 국내에서 원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임.
- 임 실장은 “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일본 지진 사태와 관련한 상황 관리를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급적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日대사 “대참사 극복계기로 韓·日 더 가까워질 것”(3/16)

-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16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와 관련, 한국민들이 보여준 애도와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이 일본에 보여준 아주 따뜻한 마음을 일본은



-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무토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더욱 많은 일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한 일본대사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토 대사가 대지진 및 쓰나미 참사 이후 한국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인터뷰에 응한 취지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애도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다”면서 “특히 말뿐만이 아니라 모금활동 등 일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대해 감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에서 용기를 얻는 기분”이라고 강조했다.
 - 무토 대사는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한국 정부가 가장 먼저 일본에 지원을 했고, 현재 100명이 넘는 구조대가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인명구조를 먼저 해야 하고, 이어서 현재 47만명에 달하는 피난민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는 “피난소에 있는 분들은 현재 겨울 같은 추운 날씨 속에 생활하고 있기에 등유나 가솔린 등이 필요하고, 의약품도 많이 부족한 듯하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물을 보낸다는 지방단체도 있고, 여러 물품을 보내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수송 등 여러 가지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가 참사 이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일본 국민들의 침착한 대응에 대해 무토 대사는 “피해를 당한 분들은 자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다른 분을 도우려 하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도 서로 도와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기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혼자라면 견디기 어렵지만 힘을 모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무토대사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태에 대해 “원전이 지진은 견뎌냈지만 쓰나미로 인해 냉각기능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다”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대지진 참사로 인해 한·일 경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지난 1,2월 한국의 대일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지진으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한국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그러나 한·일 경제의 큰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총리 “日독도 주장에 성숙·절제된 자세로 대응”(3/16)

-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 “일본이 나름의 위기 상황에서 잘 절제해서 조용히 넘



- 어갔으면 하는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도 통상 때와는 다른 성숙하고 절제된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글로벌문화경제포럼 주최 특강에서 “이 상황에서 일본이 루틴하게 진행하는 일이 이뤄질지 확답할 수 없지만 당초 행보(독도 영유권 주장)대로 갈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 총리는 “(일본 돕기 움직임이) 너무 달아올라 한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는 걱정을 한다”며 “성금도 좋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를 배려하면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뒤집어질까봐 걱정”이라며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독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일관성 문제도 있고, 세계에서 어떻게 볼지 조금 걱정이 있다”고 덧붙였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갈등이 또다시 야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 김 총리는 “성숙되고 지혜로운 자세로 해결됐으면 한다”며 “지도층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김외교 “독도문제, 대지진과 별개 대응”(3/17)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이달 말 독도 영유권 기술이 담긴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대해 “우리가 (대지진과 관련해) 일본을 돕기 위해 벌이는 진심어린 운동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며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문제는 그것대로 거기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가 통상 3월말에서 4월초에 나오며 올해에도 대체로 그런 정도의 일정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日 외상 “한국의 지원은 일본에 용기”(3/18)

- 한국 정부와 국민이 지원 의사를 밝힌데 대해 일본 측이 다시 한번 사의를 표했음.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무상은 18일 오후 신임 축하인사차 방문한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많은 한국분이 일본을 돕고자 지원 의사를 밝혀오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마쓰모토 외상은 또 “한국의 지원은 일본 국민에 큰 용기를 주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강한 유대로 연결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느낀다”고 덧붙였음.

● <李대통령, 日대사관서 지진희생자 조문>(3/18)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마련된 대지진 희생자 조문소를 방문, 애도의 뜻을 표했음.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도착, 1층 로비에 마련된 빈소에



- 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문록을 작성하고 묵념했음.
- 이 대통령은 조문록에 “희생자 여러분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애도드린다”면서 “일본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리라 확신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이 함께 하겠다”고 적었음.
 - 이 대통령은 또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와 만나 “뒤편 애도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정말 우리 국민과 함께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특히 일본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모습이 인상 깊고 감동적”이라고 덧붙였음.
 - 이에 무토 대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 모두가 보여주신 걱정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거듭 고개를 숙여 이번 대지진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보여준 관심에 사의를 나타냈음.
 - 현직 대통령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일 양국 관계를 생각해 직접 가자”는 뜻을 참모진에 전했다는 후문임.
 - 이와 관련,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희생자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일본 국민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또 최대한 돕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방문”이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5월 중국 쓰촨(四川)성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위로의 뜻을 표한 바 있음.
- 日 “후쿠시마 원전 현황, 적시 정보제공”(3/19)
- 일본 정부는 19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 剛明) 외무상은 이날 일본 교토(京都) 영빈관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사태수습과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번 대지진과 해일 사태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피해복구와 구조지원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김 장관은 또 이달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한일 양국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줄 것을 촉구했음. 이에 대해 마츠모토 외상은 “잘 알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간 재난관리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해나가기로 했음. 양측은 또 지난해 8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담화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문제를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음.
 - 양측은 이와 함께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한·미·일 3국간 공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음. 마츠모토 외상은 “현 단계에서 북



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 김 장관은 지난 14~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8(주요 8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을 규탄하는 공식 문건이 채택된 데 대해 일본 측의 역할을 평가했음.
- 한편 김 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양자회동을 갖고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해 한·중이 힘을 합쳐 일본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양국은 또 올 상반기 중으로 김황식 총리의 방중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중간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음.

● 당국자 “日 교과서 검정결과 주시”(3/20)

- 정부 고위당국자는 20일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당국자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검정 절차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내용이 발표되면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이 당국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일본 외무성이 최근 대지진에 따른 비상사태 등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조절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본은 지난 2008년 7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고, 일본 민간출판사 대부분이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당국자는 이어 일본 대지진 후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인도주의적 지원 움직임과 독도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분리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음. 그는 “일본 지진 피해복구를 돕는 것과 독도 영유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일본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계속 전달해왔다”고 말했음.

라. 미·일 관계

● 오바마, 간 총리에 원전문제 지원 표명(3/17)

-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방사능 누출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의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오전 이뤄진 30분에 걸친 간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관련 “당면한 대응뿐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의 파견과 중장기적 재건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간 총리는 “자위대와 경찰을



포함한 모든 조직을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간 총리는 미국으로부터 파견되는 원자력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음. 양국 정상의 전화회담은 지난 12일 새벽에 이어 대지진과 쓰나미 발생 후 2번째임.

마. 중·일 관계

● <日대지진> 中 “인민해방군 파견 희망”(3/15)

- 중국이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일본을 지원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15일 보도했음.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면 인민해방군이 사상 처음 일본 영토에서 활동하는 것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됨.
- 중국 국방부 신문사무국 관계자는 “일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해 민중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초래한 것에 중국 인민과 군대는 우리 일처럼 느끼고 있다”며 “일본 인민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국군은 원조물자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구급대, 위생방역부대, 해군 병원선을 파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진 발생 직후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에 미리 인민해방군 지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중국은 2008년 쓰촨 대지진 때는 일본의 자위대 파견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다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 영유권 갈등 여파로 아직 정부 간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인민해방군 파견 제안을 통해 관계 개선의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이에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에게 전화를 걸어 지진 참사에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에게 지진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시했음. 중국 정부는 지진 직후 특별기를 띄워 15명의 구조대와 함께 긴급구호물자를 일본으로 보냈음.

● 中외교부 “日, 어려움 극복하리라 믿는다”(3/15)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대지진과 관련, “중국 정부와 인민은 여러 방식으로 깊은 위로를 표시했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중국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음.
- 장 대변인은 이어 “공산당과 영도자들은 일본 내 중국 공민(국민)의 안위를 중시하고 외교부를 통해 긴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국 공민 사망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서 일본에서의 중국 공민 철수계획에 대해 “현재 일본 정부의 협조 아래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그 수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일본 내 핵 방사능 유출 문제에 대해 “핵 안전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정부 역시 이를 매우 중시하고 있고 핵발전소 운영에서 이를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누출) 사건 이후 중국 내 환경부문이 검측을 강화하면서 일본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중국 내 검측 결과는 이상이 없고 핵발전소 운영도 정상적인 상태”라고 전했다.

● 中, 닌오위다오 자국영토 표기안한 지도 엄단(3/20)

- 중국 당국이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는 닌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를 자국 영토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영토 표기에 오류가 있는 자국 지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20일 보도했음.
- 통신은 중국 측량국과 공산당 선전부, 외교부 등 13개 중앙부서가 합동으로 올 한해 국경 표기를 잘못했거나 영토를 누락한 ‘문제 지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닌오위다오와 이 섬 인근의 츠웨이(赤尾) 도서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 지도로 지목했으며 국가적 기밀까지 버젓이 공개된 지도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문제의 지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단속이 웹 사이트에 올라 있는 지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음. 중국의 중앙정부 13개 부서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도 단속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른 나라와의 영토 분쟁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임.
- 닌오위다오를 실효 지배 중인 일본 정부가 1884년 닌오위다오를 처음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닌오위다오를 중국 땅으로 명시한 1808년 제작된 고문서가 경매에 부쳐져 비상한 관심을 끌었으며 중국은 이 고문서가 오래전부터 닌오위다오가 중국 땅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일본에 맞서왔음.

● <日대지진> 中외교부장, 최대지원 약속(3/20)

- 중국이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와 관련, 재난구조와 재건작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국·중국·일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 剛明) 외무상과 만나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0일 보도했음.
- 양 부장은 “일본이 빠른 시일 내에 핵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도 피력하면서 중국 정부를 대신해 재난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전했다.



- 그는 이어 “일본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특히 양국간 외교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양국이 전략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견해가 다른 영역에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민감한 이슈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상호 신뢰를 높이고 공통 이익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 이에 마츠모토 외상은 재난 구조팀과 구호물자 지원에 감사를 표시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위기와 관련해 제때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음. 그는 이어 “일본은 일·중간에 전략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 간 고위층 교류와 협력 확대의 증진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바. 일·러 관계

● <日대지진>러, 원전 화재 진압 요원 파견 제안(3/18)

- 러시아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극복을 위해 원전 화재 진압 요원을 파견 하는 등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극복을 위해 원전 화재 진화 작업 참여 등을 포함해 모든 추가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음.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습 등의 노하우를 가진 러시아가 전문가들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직접 투입해 조속한 사태 해결을 돕겠다고 제안한 것임.
- 러시아의 재난담당 부서인 비상사태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도 이날 현지 뉴스전문채널 ‘러시아 투데이(Russi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 문제 해결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미 체르노빌 원전 사고 수습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일본에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 그러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 러시아 비상사태부 공보관 이리나 안드리아노바는 이날 “우리 전문가들이 일본 원전 사고 수습에 참여하는 문제는 실질적(협의) 단계에 있지 않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음.
- 한편 안드리아노바는 “(일본에 파견된) 러시아 구조팀이 지금까지 일 해온 혼슈 지역에서의 탐색구조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섬 안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그는 “기존 수색 작업에선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비상사태부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선 러시아 구조대원 165명이 파견돼 생존자 구조 및 시신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음. 이는 외국



이 파견한 구조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비상사태부는 설명했다.

사. 기 타

● 中 “상하이협력기구와 군사협력 강화”(3/18)

-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음.
- 량 부장은 17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의 SCO 국방장관 모임에서 “중국은 여러 가지 협력 계획과 조치 실행, 그리고 효율적인 지역 방위와 안보협력을 위해 군사 분야에서도 밀접하게 협력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 중국 외에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참가한 이 모임은 10년 전 상하이(上海)에서 첫 회의가 열려 상하이협력기구라는 이름이 붙었음. 이 기구는 지역안보와 안정, 그리고 역내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됐으며 역내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 차단을 명분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내 안보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해가고 있음.
- 중국은 티베트(시짱, 西藏)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의 분리주의자들 테러와 분리독립 기도 가능성이 상존하는 탓에 이처럼 주변의 SCO 회원국들과 군사협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옴.

● 한·일·중, ‘재난관리, 원자력 안전’ 협력 합의(3/19)

- 한·일·중 3국은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 참사를 계기로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츠모토 다케아키(松本 剛明) 일본 외무상,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일본 교토(京都) 영빈관에서 제5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음.
- 3국 외교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중 3국은 각국의 안정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관리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두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앞으로 있을 제4차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3국 외교장관은 올해 안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3국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음.
- 이들 외교장관은 또 3국간 협력이 폭넓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간다는 공동 비전을 재확인했음. 특히 작년 12월 체결된 ‘한·일·중 협력 사무국 설립협정’에 따라 사무국을 올해 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음.



- 3국은 그러나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대응과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동북아 정세 대응방향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음. 한·일 양국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 UEP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은 6자회담을 조속히 열어 UEP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음.
- 김성환 외교장관은 회견에서 “북한 UEP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안보리 조치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음.
- 김 장관은 이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남북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해, ‘선(先) 남북대화, 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재확인했음. 마츠모토 외상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표명됐다”며 “핵비확산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양제츠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핵확산을 반대하며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에서 규명된 목표를 견지해왔다”며 “6자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틀”이라고 강조했다.
- 양 부장은 “국제사회는 대화 재개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유리한 기회를 틀어쥐고 6자회담 틀 안에 문제를 넣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고 “각 측이 노력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실현한다면 동북아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교토에 모인 한·일·중 외교..“1분간 묵념”>(3/19)

- 한·일·중 외교장관이 19일 일본의 천년 고도인 교토(京都)에서 ‘가슴’을 맞댔음. 크고 작은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 온 3국이지만 이번에는 일본 도호쿠(東北) 대지진의 참화 앞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따뜻한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이었음.
- 교토 영빈관에서 개최된 3국 외교장관 회의는 대지진 참사의 충격과 ‘방사능 공포’의 우려가 뒤섞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막이 올랐음. 당초 예정된 개최시각인 오후 4시보다 20분 늦게 회의장에 함께 등장한 3국 외교장관은 서로 손을 엇갈려 악수한 채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사진기자단의 기념촬영에 응했음.
- 주최 측인 일본의 마츠모토 다케아키(本 剛明) 외무상은 회의시작에 앞서 “먼저 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1분간 묵념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3국 외교장관과 배석자들이 모두 일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애도의 시간을 가졌음.



- 이어 마츠모토 외상은 모두발언에서 “한중이 1차로 구조대를 보내 주고 많은 물량지원을 해준데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피해가 컸지만 서로 도와주는 정신으로 힘을 합쳐서 복구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다짐했음.
- 마츠모토 외상은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언급하며 “원전 문제로 일본 경제에 대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기반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중장기적으로 일본 경제는 회복할 것”이라며 “일본 국민의 정신은 경제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을 줬음. 마에하라 외상 퇴임 후 취임한 마츠모토 외상은 이날 시종 침착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했음.
- 이에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도 다시 한 번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음. 양 부장은 “일본이 매우 심각한 지진과 해일 피해를 당해 많은 인명과 재산손실을 입은 데 대해 중국 정부와 인민은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일본 측의 수요에 따라 더욱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 발언권을 넘겨받은 김성환 외교장관은 “한국민은 일본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이 지진피해를 반드시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위로했음.
- 김 장관은 이어 “일본이 지진피해에 따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연 것은 한·일·중 협력을 그만큼 중요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하고 “2008년부터 시작된 한·일·중 정상회담이 이제 한 회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만큼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나가자”고 역설했음.
- 일본 황실의 전통적 건축양식을 본뜬 회의장에는 3국 외교장관을 중심으로 각국 당국자들이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 3개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됐으며 정면에 주최 측인 일본 대표단이 자리했고 좌우에 각각 한국, 중국 대표단 테이블이 마련됐음.
- 대표단으로는 우리 측에서 임성남 주중 공사, 장원삼 동북아국장,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노규덕 장관 보좌관이, 일본 측에서 스기야마 아시아·대양주 국장, 사토 외무보도관, 기타노 아시아·대양주 심의관, 후지야마 아시아·대양주 과장이, 중국 측에서 우장하오 아시아국 부사장, 홍샤오용 비서관, 위홍 참사관, 류웨이민 참사관이 각각 참석했다.